

# 尹 “국가채무·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이 청년 삶 위협”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미래세대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도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 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

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차례로 언급한 국가채무, 고용 세습,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의 현안은 그 피해자가 ‘MZ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단>

## 尹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지시

### 최근 피해자 3명 잇따라 숨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변인은 전했다.”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자들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번째급

기준 변경’ 여부 등 필요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때고, 저것 때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이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를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전, 한전공대 출연금 208억 무단전용”

### 국힘, 감사결과 은폐 재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18일 한국전력공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한전공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개교 초기 진행 상황에 대한 한전의 감사에서 교직원 범죄 행각, 도덕적 해이를 적발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의 업무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면 한전공대 임직원들은 정부나 지자체 출연금 391억 원 중 208억 원을 무단 전용해 당초 교부 용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건비를 올리는 등 부당하게 전용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법안카드 위법 사용도 16억7000여만 원이 발생한 것이 발견됐는데

도 어떤 제재나 문제 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보수를 셀프 인상하면서 처장급은 3500만 원을, 팀원급은 2000여만 원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 시기는 한전 적자가 누적돼 재무적 위기에 처했던 시기”라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신들의 잇속 채우기, 뱃속 불리기에 전용한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 채용은 세부 기준 없이 교무처장 등이 추천하고 총장이 결정했고, 계약직으로 들어간 18명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으며, 직원 성과 평가를 하지 않고 2021년 성과급을 일률 지급하거나 출연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정원 외 계약직도 20여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도록 은폐 지시를 주도한 사람이 현재 한전 사장”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더 빠른 SNS 의회 구축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의정활동 정보 제공

광주시의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채널을 열고 신속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책토론회 생중계와 의정뉴스, 의정스케치 등 영상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시의회는 신규 SNS채널 오픈을 맞아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의회소개’ 및 ‘의원소개’ 영상, ‘시민의 의정 참여제도 안내’를 담은 카드 뉴스 등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 SNS 3개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 북쪽조례(조례소개) ▲발로 뛰는 의회(현장방문) ▲전지적 의원 시점(위원회의소) ▲열공하는 의원(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SNS채널 추가 개설을 기념한 이벤트도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SNS 3개 채널 중 2개 이상 팔로우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참여자 중 9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손 안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SNS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국힘, 노동개혁 특위 다음주 출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구성된 ‘1호 특위’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 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